



미래대담

“생산성 제고와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고, 새로운 경제적 협력 관계를 통해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해야 ”



■ 일시 : 2019.9.26. (목) 11:40 ~ 13:20

■ 장소 : 신라호텔 더 라이브러리

■ 참석자

사회: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대담: 랜들 존스(Randall Jones, 전 OECD 한국일본 담당관)

이번 미래대담에서는 “한국경제가 맞이할 도전 과제”를 주제로, 랜들 존스, 전 OECD 한국일본담당관을 모시고 한국경제의 미래, 국제 무역 변화에 따른 한반도 경제의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담 내용

Randall Jones 박사의 OECD에서의 활동

박성준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랜들 존스

작년 6월에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한 후 1년만에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세계지식포럼에 초청을 받아서 왔고, 한국과 일본의 최근 무역분쟁에 대해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박성준

OECD에서 30여년간 근무하셨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랜들 존스

저는 90년대 초반부터 한국과 일본에 대한 경제보고서를 작성해왔습니다. OECD에서는 경제학자들의 최신 연구물과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 정부에 정책적인 조언을 합니다.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한국에 있는 다양한 단체를 방문하는데, 전경련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경제 관련 단체들, 지식경제부, 중소기업부, 환경부와 같은 정부 부처들, 그리고 KDI, 조세재정연구원과 같은 연구소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 후에는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한 뒤 각국의 정부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각국에 대한 경제보고서는 2년을 주기로 작성이 되는데, 보고서에서 권고한 내용을 정부가 얼마나 수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미래에 한국 경제가 맞이할 도전 과제

박성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박사님께서서는 한국이 앞으로 어떠한 과제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랜들 존스

첫번째는 인구구조 문제입니다. 노인 부양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지금까지는 비교적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50년이 되면 한국은 일본과 같이 매우 높은 노인 부양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복지지출과 같은 정부지출의 증가를 야기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번째는 북한 문제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는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한국은 아마도 언젠가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시행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7%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은 이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한국의 잠재경제성장률은 최근 약 2.8%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준

인구구조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랜들 존스

한국의 국민연금은 3%의 부담률과 70%의 소득대체율이라는 매우 관대한 조건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부담률은 9%까지 상향되고 소득대체율은 40%까지 하향되었으나, 연금제도를 지속하려면 부담률을 14%정도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40%의 소득대체율은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50%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 상용근로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하기에 여전히 무리가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 개인저축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박성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연금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러한 신뢰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랜들 존스

그 동안 한국에서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이제 부모 세대가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을 본다면 이러한 연금 문화에 젊은 세대가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하향하지 말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상향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이 지속적으로 하향한다면, 사람들은 미래에 자신들이 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부담률을 올려야 하는데, 부담률이 올라간다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늦춰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65세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지만,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68세,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70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박성준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률의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그리고 연공서열에 따른 현재의 임금 구조 역시 문제입니다.

랜들 존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성세대의 취업률과 젊은 세대의 취업률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을 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소득을 갖게 되면 수요 또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가능인구는 2027년에 정점을 찍은 후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한 사람의 구직자가 1.6개의 일자리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연공서열에 기반한 현재의 임금 구조를 바꾸는 것은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보통 53세를 전후로 은퇴를 하고 있는데, 만약 임금의 상승이 생산성과 연계가 되고 근로자들이 더 오래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성준

현재 한국은 잠재경제성장률이 기존의 예상보다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있을까요?

랜들 존스

OECD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는 생산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강할수록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규제의 정도가 5번째로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정부가 과거에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왔던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는 더 이상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혁신과 관련해서 한국은 GDP의 약 4.6%를 R&D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R&D가 주로 대기업 안에 머물 뿐 공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기업과 대학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실리 콘밸리는 스탠포드 대학과 UC Berkeley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MIT와 Harvard 대학이 위치한 보스턴에도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이 정신(entrepreneurship)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혁신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스타트업의 발달이 아직 미미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 역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경우 짊어져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과 사회적인 비난 때문에 창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창업을 하기보다는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에 기반하여 창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실패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실패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스타트업은 요식업과 같이 기술 수준이 낮은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다 역동적인 경제가 형평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dualism)를 해결해야 합니다. 약 30%에 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경기에 학교를 졸업하면 낮은 임금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낮은 평생 소득을 가지게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 등의 이유로 직장 생활을 중단했다가 복귀하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약 37%인데, 이는 OECD 평균인 1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덴마크가 있는데, 덴마크 국민들은 해고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덴마크 정부에서는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에 건강보험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 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쉬워집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합니다. 현 시점에서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는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

주제를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지난 20여년간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보호무역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이러한 경향성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랜들 존스

최근의 보호무역주의는 무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이 큼니다. 이러한 기조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 미국의 돈이 사라지고 이는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무역으로 인해 이득을 얻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이는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기업들도 덩달아 가격을 인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중 무역분쟁은 소비자의 후생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무역 기조와 관련해서는 TPP나 RCEP과 같이 자유무역 기조에 긍정적인 움직임도 보이는 반면, 브렉시트나 WTO의 약화와 같은 부정적인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글로벌 가치사슬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무역 갈등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가치사슬은 기존에 비해 덜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무역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역 갈등은 전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9월에 OECD는 2019년 글로벌 GDP 성장률이 3.7%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2019년 9월에 이를 2.9%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 하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박성준

많은 경제주체들이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개방적인 무역 정책을 시행하게 될 수 있을까요?

랜들 존스

보호무역의 혜택은 소수의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의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반면, 보호무역에 따른 경제적 손해는 많은 경제주체들이 나누어서 짊어지게 되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무역 정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적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이미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는 노동자 계층에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성준

최근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인 갈등이 무역 분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양국이 현재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랜들 존스

과거사와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그 동안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이러한 관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간의 교역은 크게 증가한 반면, 한국과 일본 간의 교역이 양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1990년에 한국의 대 일본 수출 비중은 약 19%였지만 2018년에는 5%로 감소하였고, 수입 역시 약 26%에서 10%로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수출은 2.1%에서 26%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 간의 경제적 의존도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양국간의 경제적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예전과 같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정치인들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의 기업인들은 양국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적 관계를 통해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국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이전의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일본과 같은 경제 블록으로 묶이게 됩니다. 또한 과거사 문제 외에도 일본에서는 일본의 기술이 한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유출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TPP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TPP에 참여한 상당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지만,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회복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TPP 가입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박성준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이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랜들 존스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중국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들은 높은 관세 때문에 종전과 같이 높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그 동안 중국에 집중되었던 투자를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 분산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미국에 기존과 같이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강할 것이고,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해결되어 기존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것입니다.

박성준

미국과 중국의 현 무역 갈등이 미래에도 지속될까요?

랜들 존스

양국이 모두 무역 갈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의 경제성장률을 이야기하던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미국 경제 역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약 50%의 국민들이 경기후퇴(recession)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역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가 물러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파들은 중국의 산업 지원 정책이 다른 국가들의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 등으로부터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더 큰 힘을 갖기 전에 중국의 경제 시스템이 서구의 시장 질서를 따르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박성준

그 동안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동북아 분업 체계라고 불리는 무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는 이 세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까요? 특히 중국은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강세를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기술 부분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랜들 존스

한국은 노동 집약적인 단순한 산업으로 시작해서 점차 중공업 중심의 산업으로 이행하였고, 2000년대에는 기술 및 지식 중심의 경제로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등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역시 이러한 과정을 따라가고 있으며, 인구 구조의 변화와 임금의 상승 때문에 과거에 중국이 생산하던 노동집약적 제품들은 이제 점차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은 점점 더 한국이나 일본의 제조업과 같은 첨단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과거와는 다른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들을 성공적으로 따라잡았고,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위치에 도달하였습

니다. 그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두 개의 엔진 중에서 하나의 엔진으로만 운항하는 비행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도 혁신과 스타트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끊임없이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국경제가 맞이할 도전 과제’ 대담 소회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생산성의 정체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저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반드시 대처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분쟁 및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인터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OECD에서 30여년간 한국과 일본의 경제 분석을 담당했던 랜들 존스(Randall Jones) 박사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생산성의 향상 및 사회 안전망의 구축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랜들 존스 박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 경제는 성장과 더불어 분배의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합니다.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며, 둘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는 언제나 논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생산성 및 분배 문제에 대해 랜들 존스 박사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강력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람을 보호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생산성 및 분배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해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담자: 랜들 존스 (전 OECD 한국일본담당관)



○ 학력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PhD)

○ 주요 경력 및 활동

현) Visiting Fellow (Center on Japanese Economy and Business, Columbia University)

OECD, 1989-2019

US Department of State, 1987-89

Japan Economic Institute, 1985-87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1984-85